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4-16호 | 2024년 6월 18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이한주 | idp.theminjoo.kr

2024년도 윤석열정부 사회복지예산의 허상 : 약자복지의 함정

윤 기 찬 연구위원(보건학 박사)

《 요 약 》

■ 202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착시현상

- (약자예산감소) 2024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은 문재인 정부보다 각각 4.3%, 1.3% 등 증가폭 감소
- (선심용 예산확대) 2023년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가장 큰 증액은 공적연금지원(19.3%)
- (공공의료 퇴행) 전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8,886억원 감소(19.5%↓)

■ 윤석열정부 약자복지의 함정

- (착시현상) 문재인정부에 비해 기초생활복지, 취약계층지원, 노인에 대한 증액비율 감소
- (출산정책 역행) 아동보육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,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2.7% 불과
- (필수의료 외면) 지역 필수의료기관·의료인력 및 코로나19 전담 지방의료원 예산지원 부족
- (의료민영화) 한국형 ARPA-H, 바이오기술 등 의료민영화 예산증액, 향후 국민의료비 부담

■ 정책적 대응방안

- (보편적 복지) 약자복지 강화와 더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예산 확보
- (국가책임제) 민생경제에 대한 국가책임 및 국가재정 확대를 통한 약자복지 지원확대
- (공공의료산업) 바이오·디지털헬스 관련 산업 국가 주도하여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

▶ 키워드: 약자복지, 사회복지예산, 함정, 보편적 복지, 취약계층지원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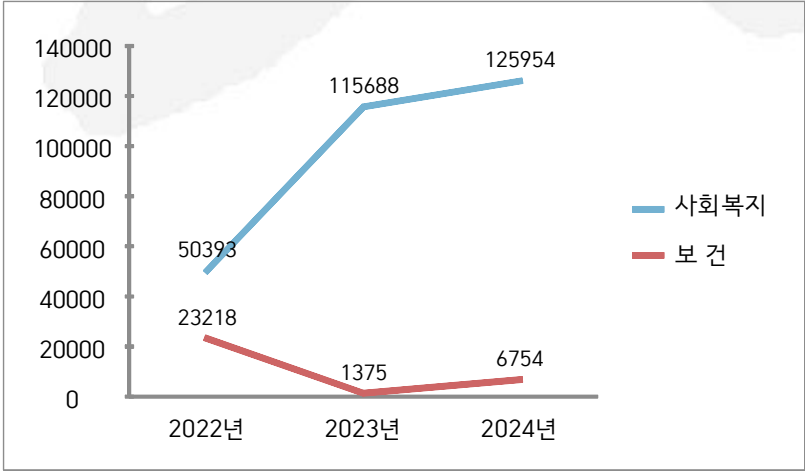
1. 202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착시현상

○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예산의 증가폭 감소

- 2024년 사회복지 예산안은 전년대비 13.3조(12.2%) 증액 중 공적연금에 대한 증액부분이 19.3%로 가장 높고,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의 2023년 예산안과 비교할 때 각각 4.3%, 1.3% 예산 감소한 상황(단위: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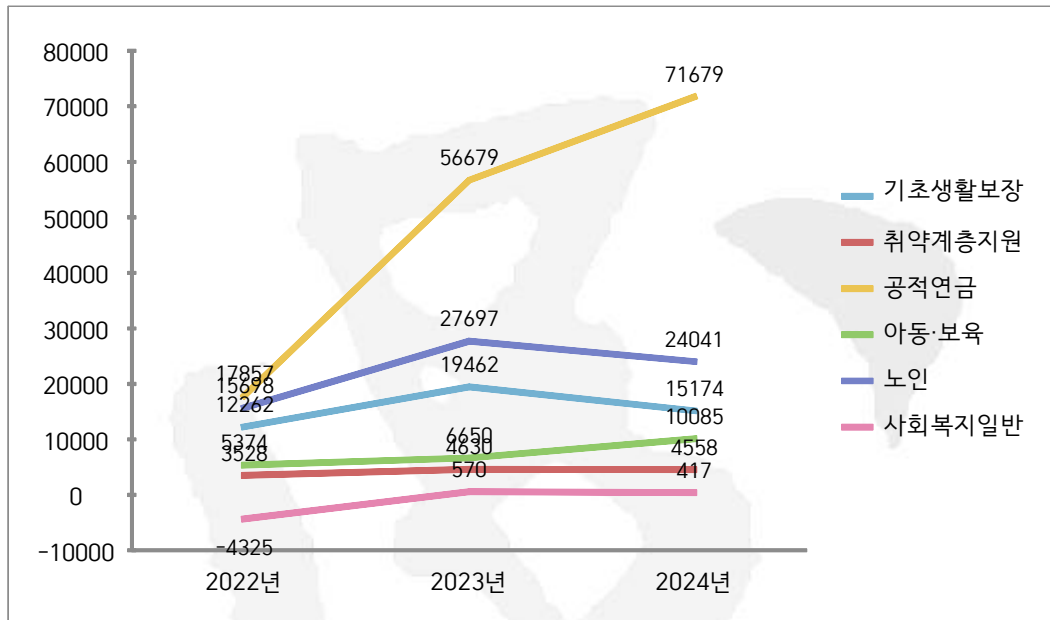
구 분	2022년(안)		2023년(안)		2024년(안)	
	증감 (B-A)	%	증감 (B-A)	%	증감 (B-A)	%
총 지 출(A+B)	73,611	8.2	117,063	12.0	132,708	12.2
◇ 예 산(A)	55,464	9.9	58,718	9.4	61,383	9.0
◇ 기 금(B)	18,147	5.4	58,345	16.6	71,325	17.4
◇ 사회복지①	50,393	6.7	115,688	14.3	125,954	13.7
○ 기초생활보장	12,262	9.3	19,462	13.5	15,174	9.2
○ 취약계층지원	3,528	9.3	4,630	11.2	4,558	9.9
○ 공적연금	17,857	6.0	56,679	18.0	71,679	19.3
○ 아동보육	5,374	6.3	6,650	7.2	10,085	10.2
○ 노인	15,698	8.3	27,697	13.5	24,041	10.3
○ 사회복지일반	△4,325	△32.5	570	6.3	417	4.3
◇ 보 건②	23,218	16.8	1,375	0.8	6,754	4.0
○ 보건의료	12,664	41.8	△3,485	△7.1	△8,886	△19.5
○ 건강보험	10,554	9.8	4,860	4.1	15,640	12.6

- 보건예산 역시 증가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건강보험 공적이전비용과 바이오헬스 관련 지원 예산에 불과하며, 취약계층 및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19.5%(8,886억원)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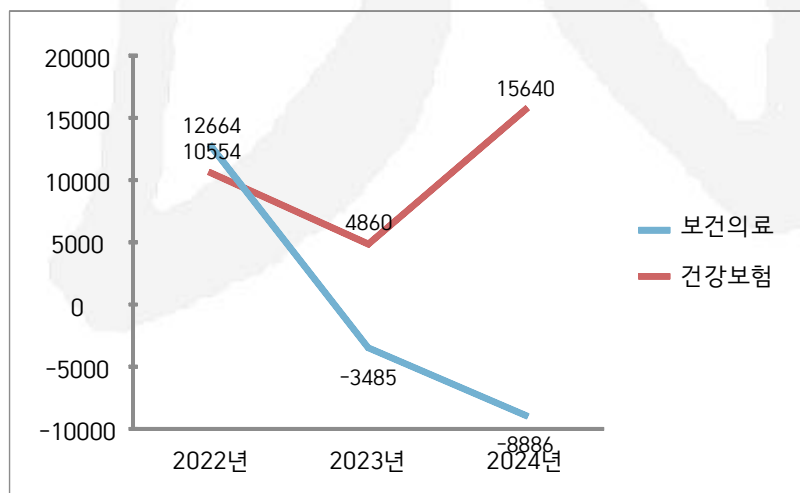
○ 약지복지 강화가 아니라 선심용 예산 확대 불과

- 2024년 사회복지 예산안 중 가장 큰 폭의 증액은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지원(19.3%)
- 2023년 대비 기초생활보장(13.5%→9.2%)이나 노인(13.5%→10.3%)에 대한 예산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오히려 감소세
- 아동보육 예산은 2023년 대비 3,435억원 상승, 실질적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



○ 약자복지 강화로 국민의 보건복지 관련 부담은 급증

- 전체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8,886억원 감액,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
- 증액된 건강보험 예산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20%에 맞추기 위한 허상에 불과



○ 약자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, 전체 국민은 각자도생

- 저소득층, 장애인, 아동, 보육 등에 대한 집중적 예산지원은 전체 국민 중 약 30% 수준
- 전체 국민 70%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편적 보건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며, 각자도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해야 하는 상황
- 특히 청년에 대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고단한 삶을 국가가 제공

2. 윤석열정부 약자복지의 함정

○ 윤석열정부의 약자복지 강화는 착시현상

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내용

- 2024년 보건복지 예산의 총 증가율이 12.2%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2.8의 4배 확대
- 저소득층·노인·장애인 등 약자복지 강화와 가족돌봄·고립·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 발굴
- 생계급여 13.16% 증가, 노인일자리 103만명,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담 돌봄서비스 등

- 실제 문재인정부 2023년 보건복지 예산 12.0% 증가와 비교 증가율의 변화 없는 편
- 기초생활복지는 2023년 예산증가율 13.5%(19,462억원)보다 낮은 9.2%(15,174억원)
- 노인에 대한 2024년 증가율 10.2%(24,041억원)는 2023년 증가율 13.5%(27,697억원)보다 낮은 수치

○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찔끔

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지원내용

- 필수가임력 검진비용, 냉동난자 사용 비용 신설
-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확대와 시간제 보육기관 2배 이상 확충

- 아동보육 관련 2024년 예산증액은 10,085억원으로 2023년 예산증액 6,650억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
- 그러나 2024년도와 2023년대 증액의 차이는 3,435억원으로 2024년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2.7% 수준에 불과

○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은 일부에 불과

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체계 내용

- 응급의료체계 정비와 소아의료체계 구축
-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실시

- 소아, 응급을 제외한 지역사회 필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 부족
-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지역사회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 전무
- 근본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이 아니라 일시적 땀방식 예산안에 불과

○ 바이오·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

- 한국형 APPA 사업은 보건안보 확립, 미정복질환 극복, 바이오헬스 혁신, 복지돌봄 개선, 필수의료 확충 등이 포함되는데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같이 공공부문에서 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주도 수행가능성
- 한국형 ARPA-H는 미국 국립보건원(NIH)산하에 'ARPA-H'를 신설하고, 3년 동안 65억 달러 지원 프로젝트로 (약 8조 5900억원)를 지원한다.
- 2024년 보건의료 예산은 8,886억원 감소에도 불과하고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1,099억원 증액

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체계 내용

- 한국형 ARPA-H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적 연구 강화(495억원 증액)
-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(604억원 편성)

3. 보건복지위원회 확정예산 증액 현황

○ 2024년 보건복지 주요 예산증액 내용

- (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) 민주당의 요구로 국민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(10개소) 실시(85억 증액)
- 노인건강관리 12억원, 장애인연금 269억 등 낮은 비율의 증액
- (출산·양육 지원) 위기임산부 상담사업 42억원,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108억 등 실질적 저출생·인구위기 문제 해결에 부족한 실정
- (필수의료 강화) 윤석열정부에서 강조했던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역량강화 514억원, 시설현대화 10억원 등 필수의료체계 확립에 부족한 실정

○ 2024년 보건복지 예산증액 시사점

-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복지 예산 중 예산증액이 가장 큰 부분은 공적연금으로 전년 대비 7조 1,720억원이 증액되어 19.3% 차지
-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는 14.3%에 불과하며, 오히려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은 7,953억원 (17.5%) 감소 전체 보건복지 예산 중 전년 대비 가장 낮은 3.0%(5,015억원) 증액 비율
-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9.2%, 취약계층지원 10.7%, 아동·보육 10.6%, 노인 10.4% 등으로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 전체예산 증가율 12.1%보다 낮음

(단위 : 억 원)

구 분	2023년 예산 (A)	2024년 예산 (B)	전년대비	
			증감 (B-A)	%
총 지 출(A+B)	1,091,830	1,223,779	131,949	12.1
◇ 예 산 (A)	681,447	741,794	60,347	8.9
◇ 기 금 (B)	410,383	481,986	71,603	17.4
◇ 사회복지 ①	922,185	1,049,119	126,934	13.8
○ 기초생활보장	164,059	179,197	15,138	9.2
○ 취약계층지원	46,112	51,068	4,956	10.7
○ 공적연금	371,600	443,320	71,720	19.3
○ 아동·보육	98,470	108,888	10,418	10.6
○ 노인	232,289	256,483	24,194	10.4
○ 사회복지일반	9,655	10,163	508	5.3
◇ 보 건 ②	169,645	174,660	5,015	3.0
○ 보건의료	45,543	37,590	△7,953	△17.5
○ 건강보험	124,102	137,070	12,968	10.4

4. 정책적 대응방안

○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확대

-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예산 증가비율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, 약자복지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전체 국민의 삶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제공
- 기초생활보장, 취약계층지원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일반 예산에서 기본소득, 기본금융, 기본 주거, 기본교육 등 전체 국민 대상 사회복지 예산 증액
- 약자복지 보다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철학이 있는 정책 및 예산기획 편성 필요

○ 각자도생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

- 민생경제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,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국가가 책임지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(예: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)
- 경제위기에 긴축재정이 아니라 팽창재정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, 국가채무 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한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

○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의료산업 육성

- 바이오헬스 분야 등에서 민간주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유출,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국민의료비 부담 등 의료민영화로 인한 폐해 가능성 사전에 차단 필요
- 상급병원 중증질환 지원금 강화, 공공의료를 외면한 의대정원 증원, 비대면진료 수가향상, 민간보험 간소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지양
- 공공부문이 바이오헬스, 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을 주도하여,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 및, 민간주도 시 예상되는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
- 국가주도의 바이오헬스, 디지털헬스 기술개발로 신산업 육성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

<참고문헌>

- 김지연. (2020). 비대면 시대,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안. 「KISTEP Issue Paper」.
- 동아일보. “1년치 약 미리 사두세요?... 과잉 비대면처방 유도”, 2023년 7월 4일자 기사내용.
- 메디게이트뉴스. “슈퍼앱 도전하는 0000, 비대면 진료 침투율---”, 2022년 8월 18일자 기사내용.
- 윤기찬. (2016).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. 「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」.
- 의료정책연구소. (2020). 「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」.
- _____. (2022). 「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」.
- _____. (2022). 「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시사점」.
- 이코노미스트. “투자사 뭉치돈 몰렸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---”, 2023년 6월 1일자 기사내용.
- 중앙일보. “월급 206만원에 37개월, 공보의 싫다, 현역 갈 것 75%”. 2023년 6월 7일자 기사내용.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. (2022). 「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자 경험 조사」.
- MBC. “고삐 풀린 비대면진료... 초진 환자도 모두 비대면?”. 2023년 6월 19일자 보도내용.
- Kingdon. J. W. (1995). *Agendas,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*. Bosten: Little, Brown and Co. 2nd Edition, 1995.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